

MB 등 1373명 특사...김경수 복권없이 형 면제

김경수 복권은 안해...정치 재기 발 묶어둬 김기춘·우병우 등朴 '국정 농단' 공직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인 MB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국민통합'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해 올린 특사 명단을 의결하면서 통합을 부각,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대통령 특별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최고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다. 두 사람 모두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 전 대통령에는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이 이뤄진 반면,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남은 형만 면제하

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

MB에 대한 대선 대통령 사면에서 관례처럼 돼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의 썩을 잘라 놓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정치인 중 여론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대 전 광주시장 등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운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공직자'로 분류돼 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만 줄여주는 쪽으로 결론났다.

일각에서는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외교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집행률, 추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인원수로 균형이나 불균형이나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은 '민외교'를 엄중하게 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한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복권을 하지 않은 것이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켰고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사면에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됐다.

/뉴시스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계획서 오늘 제출 목표” 신세계그룹 “걸림돌 부지 해결된 만큼 멋진 안 시에 제안”

광주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에서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신세계 그룹이 이번주 중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등산에 추진하기로 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를 해가 가기전 이번주중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날 서진건설이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무된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스타필드 건립에) 가장 큰 문제인 부지의 걸림돌이 해결된 만큼 거기에 부합해 멋진 안을 28일 제출 목표로 이번주중 시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입장을 통해 "신세계프라퍼티측에서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대표는 지난달 이르면 연말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대표는 당시 "8월 발표한 내용은 방향성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연내 목표로 제안할 내용은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넣어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안이 될 것이다"면서 "콘셉트를 어떻게 담는가가 핵심이어서 현재 다양한 내용을 잘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등산은 스타필드다움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고 특히 도심에서의 주민들의 일상탈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축이다"면서 "스타필드하남, 고양, 코엑스에 이어 내년 수원, 다음 창원 이어 광주는 (스타필드) 중요한 핵심도시다"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윤건영, 국정상황실 질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못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7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참사 상황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하며 공세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국정상황실장이 맞붙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특위 기관보고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의원이 현재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문자 한 실장은 "위기관리시스템은 센터에도 있고 센터에 관련된,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한 실장이 발언하는 도중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것"이라며 인성을 높였다. 또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따로, 사람 따로 있으면 그건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가 현황 듣는 이재명 27일 오후 장흥군 금송영농조합법인의 파프리카 농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농가 현황을 듣고 있다.

전남 출향민 ‘고향사랑기부제 잘 모른다’ 홍보 강화 필요...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제도 인지 9.0% 그쳐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민과 출향 2세대 중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향민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젠디앤디에 의뢰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민과 부모님이 전남 출신인 1335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6일 밝혔다. 표본 오차 ±2.28%, 95.0% 신뢰수준

조사 대상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고향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할 지를 묻는 설문에는 3만원 미만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10만원 미만(21.9%), 3~5만원 미만(16.5%), 10~20만 원 미만(13.3%), 20~30만원 미만(4.3%) 등의 순이었다.

기부 풍기를 묻는 설문에는 애환심(응원 등)이 2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금감면 혜택(19.4%),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17.0%), 개인적 행복감(12.1%), 신선한 농수산물 수령(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여부에 답례품 유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는 설문에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49.3%(큰 편 38.9%, 매우 큰 10.4%), 영향이 작다는 응답은 37.7%(작은 편 29.2%, 매우 작은 8.5%), 영향이 없다는 13.0%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뉴시스

김용 '뇌물 혐의' 추가기소 남육 "추측 건넸다"는 돈 포함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1억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2013년 설과 추석에 1000만원씩 2000만원, 2013년 4월에 7000만원, 2014년 4월의 1억원 등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2억4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北 무인기에 국내공항 이륙 일시 중단... 인천 석모도서도 무인기 경기도에 북한 무인기 포착...김포·인천공항 '이륙' 일시 중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서울 상공까지 접근하면서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공 수 개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DM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항적 추적 및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격추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서울 상공까지 접근하면서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강화군 석모도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돼 강화군이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7일 오후 2시57분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 무인기가 관측됐으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재난문자와 통해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뉴시스

그러나 우리 군이 작전상황에 돌입하면서 두 공항의 항공기 착륙은 정상적으로 도착한 반면 이륙한 일시 중단시간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

이에 대해 관영립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두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륙 방향이 북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작전에 투입됐던 항공기들이 많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이륙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강화군 석모도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돼 강화군이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7일 오후 2시57분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 무인기가 관측됐으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재난문자와 통해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뉴시스

출범 3주년 5·18조사위 “내년엔 청문회 열어 발포 책임 규명” “신군부 주요인사 등 44명 조사 완료”

출범 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내년 중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간 전두환 신군부 주요 인사와 광주에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20사단 장성 등 주요 인물 82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벌였다. 이 중 44명은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38명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위는 청문회를 통해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힌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중대 인권 침해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태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권조사 과제 21개를 조사하고 있다.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과 상해, 성폭행 ▲민간인 집단 학살 ▲행방불명·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다.

또 사건의 은폐·왜곡·조작·진압 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 등도 들여다본다.

조사위는 이러한 직권조사 과제 수행을 위해 당시 계엄군과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계엄군 2100여 명을 면담해 진술서와 녹취록 500여 건을 확보했다.

또 3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500여 명의 증언을 새로 채록했다.

조사위는 지난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60만여 쪽 분량 자료를 비롯해 국내외 신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호매민평

이태원

한파

그리추오면 보일러트셔

오매오매 추운겨

포털질

태헌

민간주도형일자리 늘리고!! 공공형일자리 노인일자리 한가정지원 줄이고!! 난방비인상에